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

| 일시 | 2017. 5. 18(목) 15:00~17: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Program

| 배 경 |

- 4차 산업혁명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새정부 출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 정책 모색
- 실효성 높은 혁신주도 중소기업 정책·전략·과제 제시와 실행방안 논의

| 개 요 |

- 일 시 : 2017. 5. 18(목) 15:00 ~ 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여의도)
- 참석대상 : 산·학·연, 정부·국회, 중소기업 CEO 등 100여명
-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 진행순서 |

사 회_ 한양대 이상명 교수

15:00~15:10	10'	【개 회 사】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5:10~15:40	30'	【발 제】 새정부의 10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15:40~16:40	60'	【좌 장】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패널토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16:40~17:00	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

발 제

새정부의 10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이 정 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1
-------	-----------	---

토 론

김 세 종	중소기업연구원장	25
홍 지 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27
김 선 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29
이 지 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31
조 용 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33
이 의 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36
김 병 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39

발 제

새정부의 10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이 정 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새정부의 10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 및 과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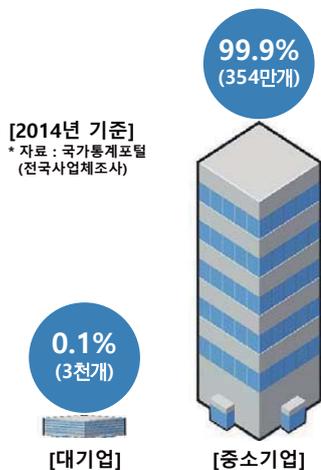
- 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 III.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IV. 직면한 환경변화
- V.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 VI. 결론

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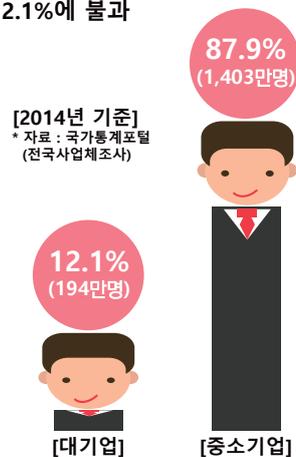
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은 총 사업체 수 중 99.9%를 차지
 - 대기업은 3,123개로 전체 사업체 중 0.1%에 불과



-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중 약 88%가 중소기업에 근무
 - 대기업 종사자는 약 194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12.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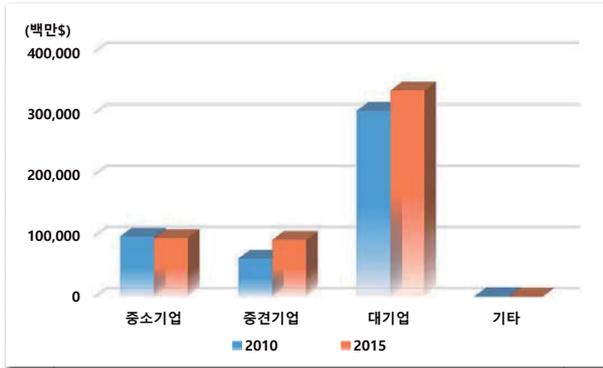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

➢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은 약 962억\$로 약 18.3%의 비중을 차지(2015년 기준)

• 대기업은 총 수출액 중 약 63.9%(3,367억\$), 중견기업은 약 17.6%(929억\$)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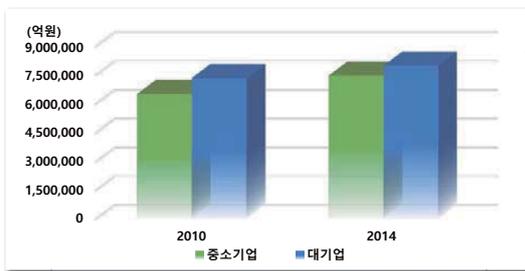
구분(백만\$, %)		2010	2015
중소기업	수출액	98,624	96,227
	비중	21.1	18.3
중견기업	수출액	62,627	92,853
	비중	13.4	17.6
대기업	수출액	303,515	336,667
	비중	65.1	63.9
기타	수출액	1,618	1,009
	비중	0.3	0.2
총수출액		466,384	526,756

* 자료 : 국가통계포털(중소기업수출입통계)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 중소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

➢ 중소제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생산액의 48.3%, 부가가치의 51.2% 비중을 차지



제조업 생산액		2010	2014
중소기업	생산액 (억원)	6,514,106	7,482,101
	비중 (%)	47.0	48.3
대기업	생산액 (억원)	7,352,190	8,001,532
	비중 (%)	53.0	51.7
합 계		13,866,296	15,483,633

* 자료 : 국가통계포털(광업 및 제조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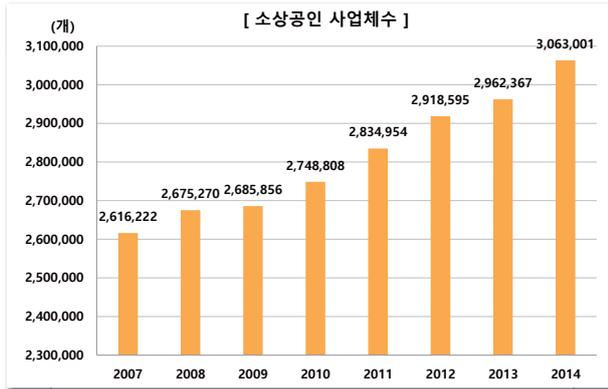
제조업 부가가치		2010	2014
중소기업	금액 (억원)	2,157,359	2,600,115
	비중 (%)	47.4	51.2
대기업	금액 (억원)	2,390,399	2,480,735
	비중 (%)	52.6	48.8
합 계		4,547,758	5,080,850

* 자료 : 국가통계포털(광업 및 제조업조사)

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

▶ 소상공인의 규모

- 2014년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06만개, 종사자는 약 60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07년 약 262만개 사업체, 종사자 약 510만명에서 2014년 약 118% 증가



* 자료 : 국가통계포털(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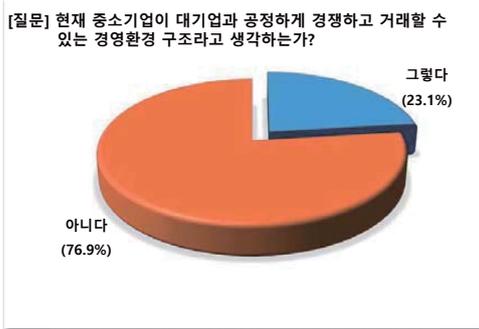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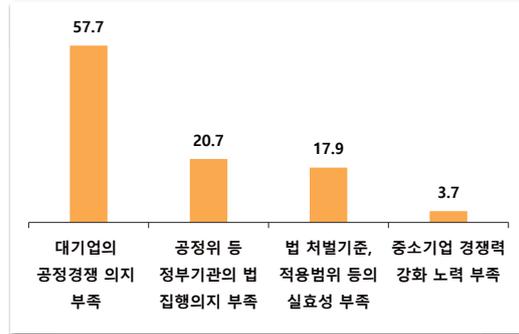
1) 기울어진 운동장

- 사회 전반의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문제로 사회 구조적 문제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가 아니라고 인식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가 아닌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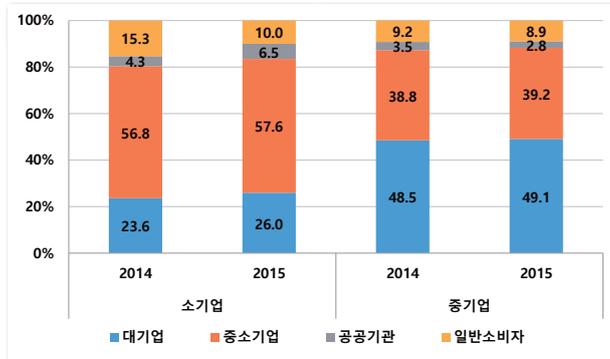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2) 대기업 종속 구조

- 중소기업의 국내 판매액의 판매처는 대기업 및 타중소기업 납품액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 특히, 중소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국내 판매액의 판매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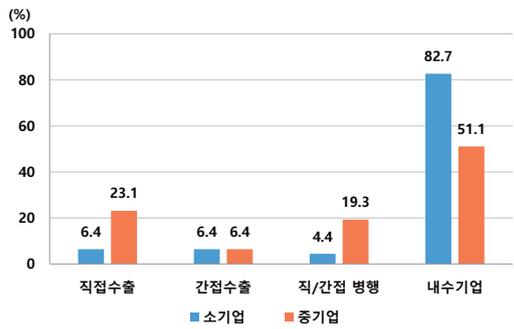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중소기업실태조사)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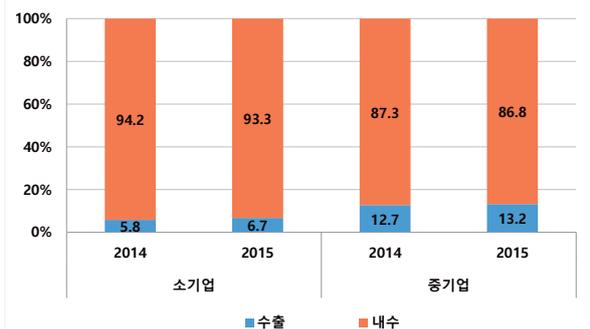
3) 내수중심 구조

- 중소제조업 중 126,469개 소기업의 82.7%, 8,323개 중기업의 51.1%가 내수에 치중
 - 총 판매액 중 소기업은 93.3%, 중기업은 86.8%가 내수판매액
-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은 약 962억\$로 약 18.3%의 비중을 불과

[중소기업의 내수 및 수출 비중(2015년, 업체수 기준)]



[중소기업의 내수 및 수출 판매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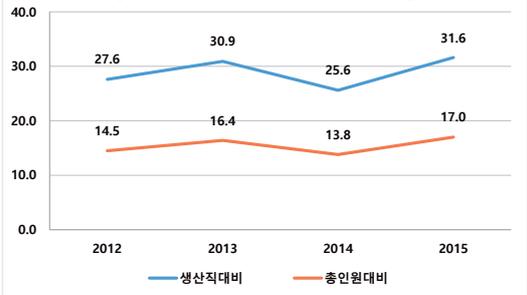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중소기업실태조사)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4)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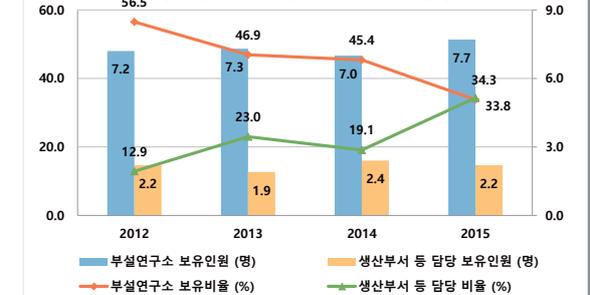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인력 확보, R&D 등을 통한 혁신역량 증대가 필요
 - 34.3%의 기업이 부설연구소 없이 생산부서 등이 기술개발을 담당,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3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중소기업 자생적 혁신 노력과 지원정책의 결합이 필수
 - 자생적 노력과 혁신 동기를 자극, 기업의 변화 유발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역량 증대 필요

[기술개발전담인력(연구개발직) 비중]



* 자료 : 국가통계포털(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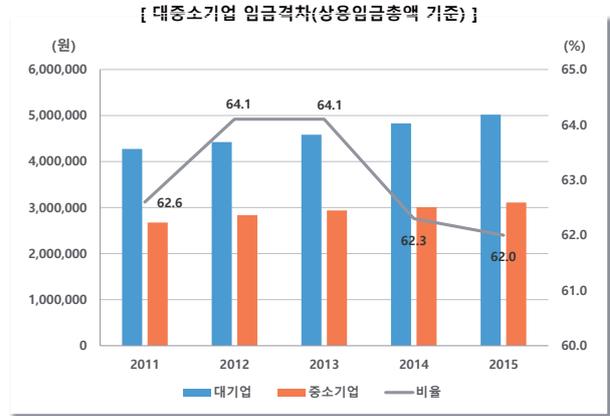
[부설연구소 보유 비율 및 인원현황]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5) 열악한 근로환경

-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증산층 형성의 기초이며, 과도한 자영업 의존도 감소가 가능
- 중소기업의 보상 수준 개선을 통한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 감소 필요
 - 중소기업의 임금은 2012년 대기업 임금의 6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15년 62.0%에 불과
-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현상 해결 필요
 -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자료 : 고용노동통계포털(사업체노동력조사)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6) 생계형 중심의 창업

- 한국은 OECD 국가 중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낮은 국가 중 하나
 - (GETR 2016) 한국의 기회형 창업 25.4%로 글로벌 평균 39.8%보다도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기회형 창업 비중 : 미국 52.1%, 영국 48.5%, 독일 39.3%, 일본 36.1% 등
 - (2017 GEM 보고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는 137개국 중 27위, OECD 34개 국 중 23위 수준
-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추어 생계형 창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자금 공급 감소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업종의 진입 자제 유도
 - 필요한 자원의 공급 및 실패 후 재도전 여건 조성을 통한 기회형 창업 확산 추진
- 기업가정신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로써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 기업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량임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7) 미약한 성장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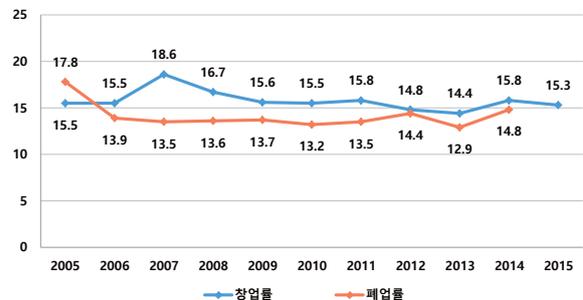
-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업체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00~500명 규모 중견기업으로 성장 : 제조업 0.06%, 서비스업 0.02%
 - 중소기업에서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 : 제조업 0.0007%, 서비스업 0.0009%
- '칸막이식 지원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발생 → 중견기업으로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희망
 - 법인세를 차등,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 중소기업 지위 유지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희망
 - (2016 중견기업실태조사) 조사대상 중견기업의 6.9%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필요
- 중견기업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고, R&D비중이 낮으며, 수출 비중 또한 낮은 특성을 보여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의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 중견기업의 R&D 비중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8)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구조전환 유도 정책'으로 전환
- 2014년 기준,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주체
- 1개 소상공인 폐업시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중소기업연구원 (2015),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 연구)
 - 2015년 기준, 약 311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약 47만 개가 폐업하는 것으로 추정
 → 최소 5.6조원에서 최대 30.3조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소상공인 창업률 및 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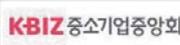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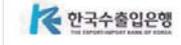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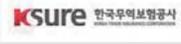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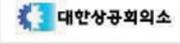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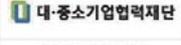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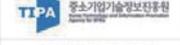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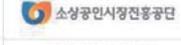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기업생멸행정통계)

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중소기업청을 비롯,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등의 타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29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시행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부처			

III.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지원분야를 창업·재기·사업전환,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등 10개 분야로 구분, 151개의 지원정책 시행 중



III.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중소기업청의 분야별 세부 지원정책 I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 창업성공패키지,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등 9개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등 5개	❖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WC300 등 11개	❖ 인력 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 3개	❖ 중소기업에 유리한 납품 제도 · 공공구매론 등 6개
❖ 창업저변 확대 · 청소년 비즈쿨, 창업아카데미 등 7개	❖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등 4개	❖ 인력유입 촉진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5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2개
❖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 스마트창작터 등 4개		❖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사업 등 4개		❖ 마케팅, 판매·홍보 ·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 정책매장 아임쇼핑 설치운영 등 8개
❖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전성 공패키지 등 5개				

III.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중소기업청의 분야별 세부 지원정책 II

수출 지원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기타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 지원 • 초보수출기업 해외마케팅패키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17개	❖ 외부전문가 노하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3개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 여성CEO MBA 교육,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10개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 중소·벤처기업M&A중개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활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
		❖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소상공인 경영교육, 역량 Jump-Up프로그램 등 12개	❖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사업 등 5개	
		❖ 소상공인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등 3개		
		❖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4개		

III.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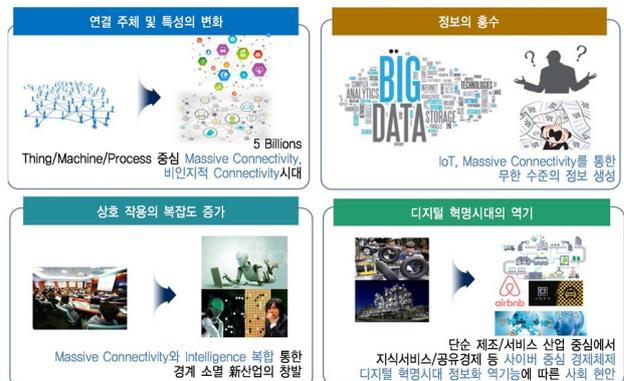
- 그동안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을 볼 때,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는 달성
-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마다 유사/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성 저하
-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시행 필요
- 중소기업 평가시스템의 미흡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보완 체계가 부재

IV 직면한 환경변화

IV. 직면한 환경변화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연결산업의 발전이 특징
 - 산업 경계의 붕괴로 산업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회형 창업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
 -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여건 또한 변화를 유도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서 글로벌화의 추진은 필수적인 요소
 - 동종뿐 아니라 이종산업에서도 Global Value Chain 연결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은 '기업가형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유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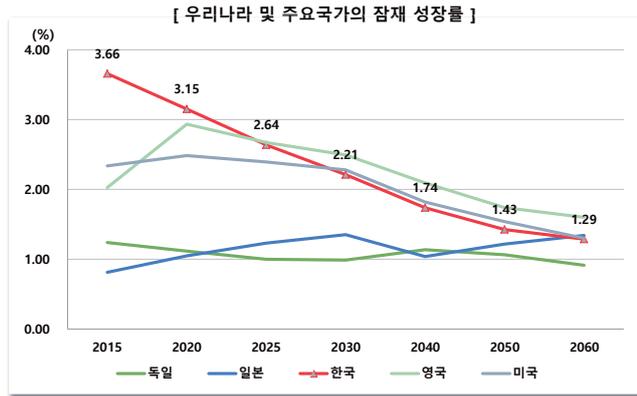
* 자료 : ETRI (2017), 전자통신동향분석, 32(1)

IV. 직면한 환경변화

2)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 우리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2015년 3.66%였던 잠재 성장률이 2030년 2.21%, 2050년 1.43%, 2060년에는 1.29%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됨
-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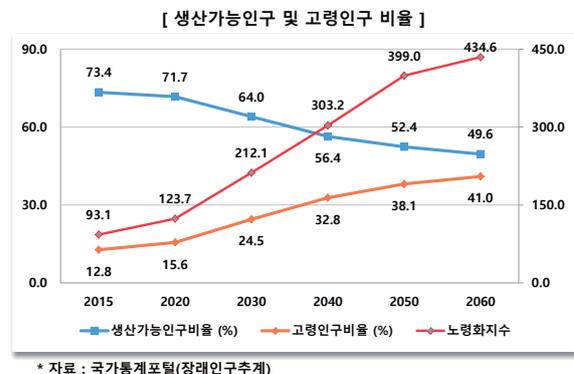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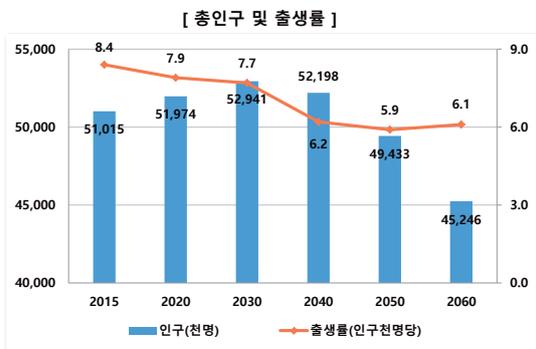


IV. 직면한 환경변화

3)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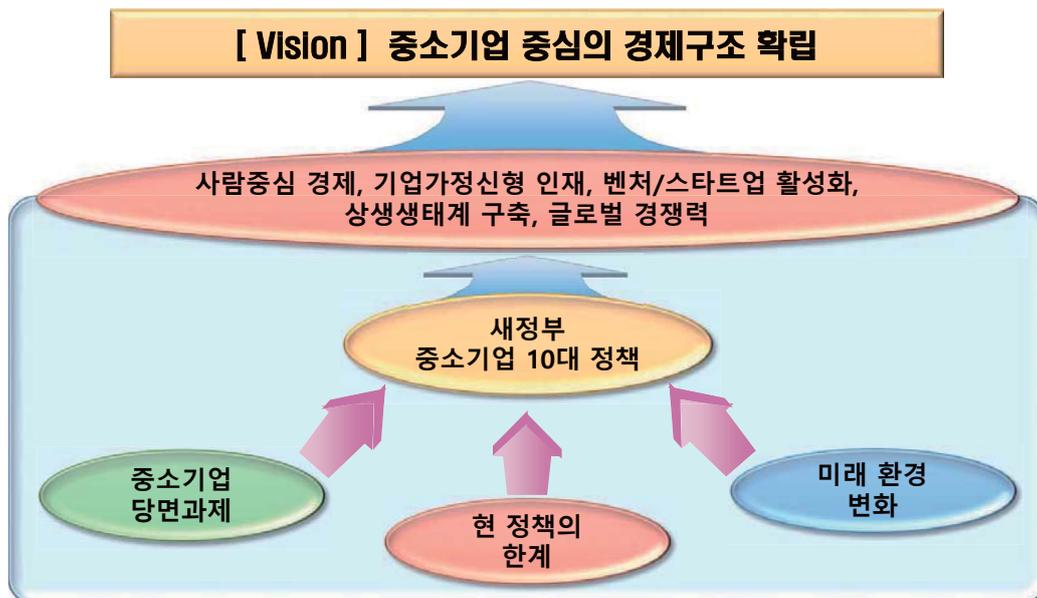
- 저출산으로 인하여 2030년 5,290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을 지속하여 2060년에는 4,524만 명으로 감소
- 206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41%까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은 49.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V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V.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 중소기업 10대 정책 개발 모형과 비전



V.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정책 1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 당면문제** > 통합된 지원정책의 부재로 사전·사후 관리 미흡
 - 정책한계** > 유사·중복된 지원정책
> 정책간 조율 부재
 - 환경변화** > 산업간 경계의 붕괴로 융합 가속화
-
- 실행방안** >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도록 제도 및 법률 정비
> 사전적 예방 정책 강화

세부실행방안

-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
- ✓ 4차 산업혁명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률 정비
- ✓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기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국세청의 역할을 과세관리와 함께 기업 및 시장동향 파악 및 전파까지 확대.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기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동향보고서의 발간 필요
 -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사전적 예방을 위한 국책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국책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부실화 사전 예방을 위한 역할 필요

V.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정책 2 공정 경쟁환경 정착

- 당면문제** > 기울어진 운동장
 - 정책한계** > 관련 제도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
 - 환경변화** > 원가절감(효율성)에서 가치창출(효과성)으로
-
- 실행방안** > 공정거래 제도와 규정의 엄격한 시행

세부실행방안

- ✓ 시장과 거래에서 공정성 확립(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거래비용 전가,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환경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책임 부여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 영역의 구분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위기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적절한 사업 영역의 구분이 필요함
 -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현재 시행 중인 '3+3 적합업종' 이후 Post 적합업종 정책방안 마련 필요)
 - 적합업종의 기본원칙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에 의한 갈등 완화, 중소기업 간 경쟁 촉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실효성 증대

정책 3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 당면문제** > 대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정책한계** > 지원정책의 부재
-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일부 지원
 - 환경변화** > '사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
- 실행방안** > 기업내 성과공유제 확산
> 근로환경 개선 지원

세부실행방안

- ✓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일터 구축
 - 중기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의 일터가 정책을 받아드릴 만한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경영진과 직원이 비록 경제적인 상황은 대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일한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문화의 구축이 필요
- ✓ 기업내 기업가와 근로자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 성과공유 유형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성과공유
 -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게 정부지원 우선 인센티브 제공 :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 성과공유 도입은 직원들의 책임감과 헌신 증대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종업원의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효과 기대

정책 4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 당면문제**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정책한계** > 기업간 합의 및 자율적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대립
 - 환경변화** >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요구 증대
-
- 실행방안**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 동반성장의 인식 확산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감소 방안 마련

세부실행방안

-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야기하며 그 성과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일은 근절되어야 함. 이는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임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는 대기업의 CSR 차원이 아닌 거래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향후 Win-Win 관점의 동반성장문화가 정착·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반영하고 있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강화 및 확대하고, 향후 공정성장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동반성장이 생색내기용 구호가 아닌 공정성장의 가치와 기본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

정책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 & 스타트업 육성

- 당면문제** > 창업의 질과 성과
- 정책한계** > 양적 창업 중심의 지원정책
- 환경변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형 기업의 중요성

- 실행방안**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재도전 활성화 기반 구축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세부실행방안

-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수립 및 지원정책의 사후관리 강화
 - 창업 초기 지원, R&D 지원, 판로/마케팅지원 등 성장 단계별 지원책 강구
- ✓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을 위한 R&D지원 강화
 -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민간 투자펀드 활성화와 정부의 마중물 투자기금 조성)
 -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 참여 유도
 - 기회형 창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기반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재도전 활성화 기반 구축
- ✓ Positive 정책에서 Negative 정책으로 전환

정책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도록 R&D 정책 강화

- 당면문제** > R&D 투자 저조로 혁신역량 부족
- 정책한계** >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성과 저조
- 환경변화**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혁신역량 요구 증대

- 실행방안** >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 R&D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수요에 맞는 R&D 지원
 > 독일 마이스터와 일본의 모노즈쿠리와 같은 기술장인 육성

세부실행방안

- ✓ 산학 네트워크를 통한 제조기업과 대학 혹은 국책연구원의 기술개발 협력체제 강화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 ✓ 중소기업 R&D 지원, 종합관리 필요
- ✓ 독일 마이스터와 일본 모노즈쿠리와 같은 혁신기술 장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 따라올 수 없는 제조기술력을 갖는 것이 경쟁력이며 이를 위해 교육 및 연구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

정책 7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 당면문제** > 소상공인 생존을 하락의 가속화
 - 정책한계** > 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저조
 - 환경변화** >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
- 실행방안** >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구조전환 유도
 - > 지역 특성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 > 소공인 육성 강화
 - > 강소(small giant) 소상공인 발굴을 통한 Best Practice 확산으로 소상공인 희망 키우기

세부실행방안

- ✓ 기업가정신(상인정신) 회복 및 강화
 - 도전과 혁신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가정신(상인정신) 필요
- ✓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 수립
 - Two Track의 소상공인정책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와 소상공인 경쟁촉진정책)
- ✓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생계형 적합업종
-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 ✓ 소상공인 정책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중심 정책의 강화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의 역할 분할 및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 ✓ 고용효과가 큰 소공인 육성 : 장인정신 고취
-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Negative Effect로 소상공인 타격 우려에 따른 대응책 강구
- ✓ 현재 시행 중인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정책의 진단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협업화 및 조직화 구축을 지원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필요

정책 8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 당면문제** > 중소기업의 낮은 수출 비중과 중간재 중심의 수출
 - 정책한계** > 수동형 지원정책
 - 환경변화** > 내수시장 정체에 성장도약을 위한 글로벌화 필요성 증대
-
- 실행방안** > 시장개척 중심의 능동적 지원정책
 - > 부품 및 특정시장 중심에서 시장다변화 및 소비재 수출 강화

세부실행방안

- ✓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동형 지원정책에서 직접적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능동형 지원정책으로 전환 필요
- ✓ 청년 해외시장인턴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시장개척 청년상사맨 육성 (청년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 ✓ 한국상품의 해외수출을 돕는 상사형 벤더기업 육성
- ✓ 중간재 수출과 더불어 소비재 수출의 활성화 필요
- ✓ 온라인 활용 수출 증대
 - 글로벌 온라인 시대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책 9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 당면문제** > 중소기업의 판로/유통에 대한 지원 요구
- 정책한계** > 판로정책의 부재(공공판로/조달 중심)
- 환경변화** >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복잡성 증대

- 실행방안** > 판로/유통 중심의 지원정책 수립
> 혁신적 유통채널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

세부실행방안

- ✓ '금융지원 → 판로지원 → 마케팅지원'으로의 정책 변화 요청
- ✓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정책 강화 필요
 - 중소기업들은 주요 애로요인으로 판로개척을 지적. 지금까지 판로정책의 비중은 중소기업정책에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약한 것이 사실임
 - 개별 중소기업이 변화가 많은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연합마케팅 필요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판매 전문 역량이 부족. 자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문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판로지원정책 강화 필요
- ✓ 온라인 지원 정책 필요
 - 판로의 온라인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책 10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 당면문제** > 과도한 실패비용으로 인한 재도전 가능성 저하
- 정책한계** > 용자 중심의 금융지원정책
- 환경변화** > 투자 기법의 다변화 및 경쟁환경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 실행방안** > 중소기업 평가시스템 강화
>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세부실행방안

- ✓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구축
 -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 선순환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정책 수립
 - 클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등 다변화된 투자기법의 활성화
 -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강화 정책 마련

IV 결론

VI. 결론

▶ 새 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체계



토 론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

- 김 세 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 지 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김 선 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이 지 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 용 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 의 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병 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토론 1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 차기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 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

□ 차기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모습

① 혁신적인 중소기업

-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기존 제조기업의 변화에 따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기업형태의 출현
- 스마트제조, 클라우드펀딩, 개인방송, 클라우드서비스, 3D프린팅, 1인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혁신형 스타트업

② 민첩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 핵심경쟁요인이 물리적 생산요소(규모, 크기)에서 지식과 지능을 기반으로 속도경쟁이 중요해짐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변화, 기술혁신, 의사결정 등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짐

③ 창의적인 중소기업

- 개인의 지식과 아이디어, 사내 아이디어 교류 및 활용, 개방형 혁신, 산업간 융합의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출현
- 과거 개발연대에 형성된 후발주자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fast mover가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지식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④ 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기업규모 확대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정체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유도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의 특성(하도급 vs 독자브랜드, 혁신형 vs 일반형, 내수기업 vs 수출기업)에 따른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및 R&D지원을 통해 고용과 매출액, 수출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지향

□ 중소벤처기업부(가칭) 역할

- 혁신생태계 조성 :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네트워크 강화 :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간 협업 및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전달체계를 단순화
- 플랫폼 기능 : 중소·벤처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수요자와 공급자간 피드백

토론 2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기대감 증대

-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과제로서 그동안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던 구미 선진국 조차도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중
- 한국도 새로운 성장선도 축으로서 중소기업 기대감이 한층 증대되면서, 정부 지원조직도 청(廳)에서 부(部)로 승격 앞둠

○ 새정부 10대 혁신전략 및 세부 이행과제(안), 차질없는 체계적 추진 필요

- 최근의 국내외 산업·기업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발제자의 10대 혁신전략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과제는 적절하고도 시급한 과제들로서 차질 없는 체계적 추진이 필요
- 다만, 과제별로 전략적 중요도, 이행 난이도, 추진 방법, 성과발현 시기 등이 각기 상이한 바, 차별화된 세심한 정책기획과 추진이 필요
- 특히,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정부지원(input)이 중간 정책목표 및 최종 기업성으로 전환되는 과정(black box)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

○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구축, 병행 필요

- 중소기업의 창업-발전-재도약 등 성장단계별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된 것이 사실
- 다만, 350만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올바른 기업생태계 구축에도 힘써야 함
-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내, 공공부문 간 함께 더불어 사는 기업생태 환경 조성이 필요

○ 정부 유관부처 선도역량의 강화 및 여건 조성

-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격상 논의 배경에는 유관부처의 협력 내지 선도하는 데 극복하기 힘든 정부조직 편제 상 한계장벽에 기인
- 사실, 중소기업 문제해결에는, 조직편제와 관계없이, 타 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며, 현재 중소기업 당면과제 감안할 때 더욱 필요
- 특히, 중소기업'부'로 승격 경우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서야 하는 바, 유관부처의 협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및 조건 마련이 시급

토론 3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지난 20년간(1998~2017년) 정부는 한국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매개로 한 기업의 성장 정책(Scale-up) 즉,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약 30조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과 성과 파악을 위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DB화하고, 지원의 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4개 정부부처(KOSBIR 시행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청)는 235개 사업, 54,031개 과제를 통해 73,475개의 중소기업(중복기업 제거시 25,885개)에 R&D를 지원하였다. 235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은 ‘R&D 기반조성’, ‘성장 촉진’, ‘글로벌 시장 선점’, ‘임무지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지원은 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은 5.2년, 평균매출 149.8억 원, 종업원수 41.3명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며 제조업이 66.7%를 차지, 91%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정부의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성장지표(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증가율, 부채 증가율)와 혁신지표(R&D 증가율, 1인당 R&D 증가율)에서 양(+)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이끌며, R&D재투자를 유인했음을 알 수 있다.

혁신정책 관점에서 R&D를 수단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기존까지는 유효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과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개발의 투입요소의 한계 극복을 위해, 협력파트너와 지식을 교류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식생태계(knowledge ecosystem)를 구축해 나갈 것을 향후 중소기업 R&D지원의 변화 방향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STEPI는 최근 3년간(2013~2015년) 중소기업청의 협력 R&D지원 DB를 기초로 협력 R&D 네트워크를 지식생산 주체의 다양성,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성, 참여 개체 간의 연결성, 정보근접에 용이한 접근성, R&D 역량이 달라도 참여가능한 균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체 수 측면에서는 성장이 관측되나 연결성은 여전히 낮고, 중소기업은 정보접근에 불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 방식에서 진화하여 정보의 원천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자금의 한계나 기술적 부족으로 기술협력에 애로를 겪지 않는 지식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지식생태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연(연) 및 전문(연)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생태계의 진화 발전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할 허브로 **지역정부의 역할 강화** 즉,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식 공유의 장 마련, 중소기업 입장에서 효율적 정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지식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 규모에 따른 **지원비 차등화** 등 다자간 협력 R&D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토론 4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새 정부는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새 정부가 제시한 10대 정책 및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근거하여 효과적 중소기업 정책 실행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1. 생계형 중심의 창업 관련하여...

-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양하면서, 숙련과 기술 중심의 창업을 지향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 이를 위하여 (특히, 은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전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제품 생산과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숙련 및 기술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더 필요함.

2.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정책 1과 관련하여...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1) 근로시간의 단축, (2) 최저임금인상,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자체의 인력 개발 및 관리만을 근로자를 채용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있음.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 향상 및 경력 관리, 그리고 체계적 인력관리 (채용-교육-전환 배치-평가-보상 등)를 지원한 정책이 필요함.

- ✓ 중소기업에서의 효과적 인력육성프로그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역량향상은 중소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다 나은 미래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러한 인력육성프로그램은 보다 나은·보다 많은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 할 것임.

토론 5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제 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중요한 행사로 진행되는 “새 정부 중기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정희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당면문제와 현 정책의 한계 그리고 미래환경 변화를 진단하여 중소기업 10대 정책 개발 모형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된 많은 항목 가운데에서도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특히 취약한 R&D 역량,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많은 산업 부문에서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 등의 항목은 중소제약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새 정부에 바라는 혁신전략 과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시된 10대 정책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항목은 ‘내수시장에서 글로벌시장으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제약산업은 약 20조 규모의 내수중심의 구조로서 협소한 시장규모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거대 시장이며 토탈 헬스케어 시장은 1경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성장을 주도했던 IT산업 중심의 성장기반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였고 이종산업간 Global Value Chain연결이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산업의 방향성을 내수중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헬스케어를 향한 시장진출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을 위한 여건을 진단해보면 먼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나라 최우수 인재들이 신약개발과 의료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경험의 축적으로 제네릭 제품개발 단계를 벗어나 신약개발 역량이 확보되었고 일부 성과를 나타내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세계적 품질관리수준에 부합하는 PIC/s 및 ICH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제약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시작은 활발한 R&D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사의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간 수 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반면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5년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평균 9.1% 수준이며 혁신형기업의 경우 14%대로 세계적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제약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신약개발보다는 개량신약에 대한 R&D를 우선할 필요가 있으나 이 또한 수십억(70억)에 달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R&D 단독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즉, Collaboration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R&D 기회를 공유하며 나아가 공동의 마케팅을 추구한다면 자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상생공존과 상호발전을 꾀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의 실현을 통해 부가적으로 양질의 고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제약산업의 고용규모는 2011년 약 74,000명에서 2015년 약 94,000여명으로 2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 중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앞으로 R&D의 수요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석·박사 중심의 고용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소제약사의 경우 연구소 입지조건과 급여 등의 이유로 우수 인력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모 업체에서 연구소가 지방에 소재했을 때 연구원 채용에서는 응시인력이 전혀 없다가 서울로 소재지를 옮긴 후 극소수 인원선발에도 박사급 인력 200여명이 응시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접근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면 공동 R&D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 서울시 내 공동 R&D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등의 현실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동시에 청년 고용세제혜택범위를 29세에서 35세 정도로 확대하여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제약 강국으로 알려진 벨기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플란더스’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학, 연구소,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진행을 위한 R&D센터나 지사가 운영되는 현실을 볼 때 앞서 언급했던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구축방안의 실행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공약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의 정착과 기업성장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를 통해 새 정부 중소기업 10대 정책 체계의 결론으로 제시된 양질의 고용,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그리고 글로벌화를 포함하는 통합관리체계가 적극 수용되고 효율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확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6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1 M&A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 창업촉진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회수시장 선진화를 위해 M&A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공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영역 M&A 촉진을 위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를 완화

□ 기업형 CVC 규제개선

○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창투자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 CVC는 계열사 편입 문제 등 투자에 상당한 제약 (공정거래법)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 산업계 자본의 기업 투자는 필요한 영역이며, 단순 금융업으로 간주는 곤란. 일반 지주회사의 CVC 운영을 허용하되,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창투자, 신기술금융사 등)에 한하여 예외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

□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 확대 (현행 기술가치금액의 10% →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혹은, 양도가액 기준(약 10%*)으로 공제(선택사항)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수전용펀드 확충

○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또한 한국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인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 등 회수전용펀드의 확충 필요

- 현재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운용기간은 7~8년에 불과한데, 벤처기업의 상장은 보통 13년 이상 걸리므로 투자자 측에서는 IPO 외에는 별다른 투자회수 방법이 없는 실정
- o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펀드출자자(LP) 유동화펀드, 세컨더리 펀드, M&A펀드 등)를 조성하여 벤처투자자의 유동성 지원으로 민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2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 전생애에 걸친 선순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엔젤제도를 개선하고, 초기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현실화

□ 전문엔젤투자제도 활성화

o 전문엔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경력요건 자격 등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문제발생시 사후규제 하는 형태로 전환

* 현행 자격요건 : 상장사 창업자 또는 3년이상 임원, 2년이상 심사역, 기술사, 박사 등

o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조특법 제16조1항)

- 1,500만원: 100%, 5,000만원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 5,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 이상은 기존 유지(2000년도 5,493억원 도달限)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인정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으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창업기업 투자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

o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백만원→ 1천만원,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백만원→ 2천만원)

- 코넥스 시장은 예탁금과 관계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 도입되었듯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도 투자금액 확대 필요

- ※ 기술성 보유기업에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 창업단계를 넘어 성장단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경영재기의 발판을 구축
 - 창업자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
 -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5년이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성 보유기업인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 창업단계를 넘어 성장단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단, 악의적 실패자 징벌강화)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 법인이 조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법인의 대주주 등 과점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납세의무는 벤처기업에 한해 폐지를 해서 보유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도전 기회 활성화 필요
 -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확대
 - 국가의 미래가치 창출의 해법인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실실패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 및 고의적인 실패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토론 7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border, containing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